

특 강

21세기 농촌생활개선 사업방향

김 성 훈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산업경제학과

제목이 방대하지만 주어진 본인의 견해를 간단히 펴려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필자의 전공인 농업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촌생활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농촌정책을 공부하는 본인의 의견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21세기의 농촌생활 모습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예상을 해 보아야 처방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농촌은 30년 전의 농촌과 다르고 10년후에는 또 달라질 것이므로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연구객체를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의 재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연구기관, 정책실행기관 모두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농촌주민들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현재의 농촌을 재정의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금의 행정구역상의 구분은 더 이상 실용성이 상실되었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뤄진 농촌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국민들의 주거 환경개념으로 변화하므로 점차 모든 도시와 농촌의 통합되어가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농촌의 반대개념으로서의 metropolis가 megalopolis로 변화되어 이제까지의 도시, 도시의 연결이던 점에서 이제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가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농촌과 도시가 통합되어간다는 의미이다. 일본이나 서유럽은 이미 megalopolis이다. 농촌과 도시의 통합현상의 가속화로 21세기에는

최소한 지역적으로는 거의 통합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생기고, 농촌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농촌생활과학회의 연구방향이 과제가 된다.

그 다음에 농업자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농업자체의 변화과정은 자금자족적 농업생산 체제에서 시장지향적인 상업농으로, 그리고 agribusiness화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현재는 상업농으로의 농업만 강조가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agribusiness적인 면으로의 농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1, 2, 3차 산업이 복합된 산업으로서의 면이 농업의 중추적인 면을 차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1차 작물의 재배나 가축사양이 농업이 아니고, 이것의 판매가 농업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오는 다시말해서 농축산물로부터 나오는 원료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더 나아가 무역까지 하는 agribusiness에다 이에 더하여 농업에 필요한 생산자재산업, 즉 농기계, 농약, 종자, 비료, 사료등도 추가되고, 농업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agriservice의 개념이 더해진다. 교수들이 하는 교육, 연구나 진흥청에서 하는 연구 지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공공적 성격의 agriservice와 민간적 성격의 agriservice도 agribusiness에서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이런 농업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에 대해 또 21세기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무엇보다도 사회학적으로 농촌가정의 성격이, 혹은 구성이 달라져 가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원하던

* 본 특강은 본 학회 주최로 1990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생활개선사업 방향정립을 위한 연찬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편집부에서 정리한 것임.

원하지 않은 농촌가정의 구조가 전체적인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핵가족화가 불가피하다. 가정생활이나 가정사회생활의 변화 과정을 흔히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화하였고, 그 이후에는 뭔가하고 의문을 갖는데, 예상컨데 현재는 자녀중심의 사회로의 변화되는 이행과정에 있지 않나 싶다. 그리하여 자녀중심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핵가족화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이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하는 것이 대체되게 되어 있고, 원하던 원치않던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가정에 한정시켜 보면 농업종사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인 면에서도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전망해보면 가속화 될 것이다. 현재 정부통계를 보면 농업인구가 68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6%에 미달이나 이것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여져 인구센서스를 다시 정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시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도시에 고용되어 있는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80만명도 되지 못한다. 이농은 6공화국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어 50만명/년에 이르는데 이런 추세로 단순산술계산을 해보면 14년 후에는 농업종사농가인구는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 그 만큼 이농은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가면 농업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영농구조와 패턴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농업노동의 주가 노년층과 부녀자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농촌지도 자체가 남자중심의 지도사업에서 여자중심의 지도사업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남자중심의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성중심의 지도층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핵심간부들도 여성이 차지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은 처방은 아니고 변화를 예상해 보는 중이다. 과학기술 시대, 정보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이에 농업이 쫓아가지 않으면 아예 쇠퇴해 버리거나 사

라지거나 맹장구실 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떻게 정보와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이용할 것인가, 노령층, 부녀자층이 중심이 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에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하나의 과제가 된다.

식품소비패턴이 1차상품 중심이었는데, 2차, 3차 상품적 소비패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50, 60, 70년대 초반까지 식품소비의 목적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즉 free from hunger의 입장의 소비패턴이라면 70, 80년대는 영양의 균형유지단계라고 본다. 여기에서는 신선식료품, 동물성고단백질의 공급에 관심이 주어지는데, 제 3단계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즉 가족의 건강과 생명안전이 가장 관심이 쏠집이 되는 시대로 바뀌므로 이때에 대비한 새로운 식품개발과 유통이 주 대상이 되겠고,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즉 그들은 소비자이기도 하니까 그것의 소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주관심이 된다. 아까 나온 3차식품은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식품이고,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이제까지는 환경, 공해문제가 도시의 문제로만 생각했으나 21세기의 우리농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좋은 환경속에 사니까 환경만은 도시사람보다 낫다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선을 확보했으나 21세기 농민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파괴되어버린 환경, 마지막 남은 환경을 우리농민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과제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농약공해, 화학제품의 공해, megalopolis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파괴되어가는 농촌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농촌생활개선사업 하면 지금도 서울대 농대를 비롯한 농과대학에서는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오고 있는데, 차원이 달라져서 multidisciplinary-science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이해하는데서 경제, 정치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거나 혹은 정치, 경제문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분석

접근되어 오던 방법자체가 대단히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농촌이건 도시건간에 경제조건, 환경/정치조건, 환경의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의 대상변수로서 빼놓고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면 농촌생활을 규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앞의 여러가지 외에도 독과점 자본이 농촌에 침투하여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조장하여 그 결과로 농가부채의 주요인을 형성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대상에서 빼놓고 부업을 어떻게 입식부업으로 바꿀 것인가, 농촌의 문화생활, 복지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만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다국적 기업화, 독과점화하에서 농촌가정주부들을 어떻게 힘을 모아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응해 갈 것인가가 또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정치문제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국제화시대에 농촌가정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 인간중심의 시대에 있어서 농촌생활개선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는데, 여기서의 민주화는 정치면, 인간화 중심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민주화가 바탕이 된 서구산업사회에서 처럼 물량위주, 효율위주의 분석을 하다보니 인간적 요소가 누락되고 인간문제가 누락되어 인간 소외현상이 산업사회 농촌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농촌노인, 부녀자의 소외감에의 대처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심리학, 사회학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것이 농업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것이 농촌이고, 그중에서 여성과 노인이 소외된 것이다.

또한 농촌생활의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다. 연구자도 여성, 지도사도 여성인데, 앞으로 생활개선사업의 주체, 객체는 모두 성을 초월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의 실시하에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상업농하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로 문제가 모아진다.

종합해보면, 먼저 인간중심의 생활개선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은 피도, 살도, 혼도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여태는 분석연구의 편이상 물량적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추상화 시키다보니 참인간이 누락되는 경향이였다. 인간은 경제행위 외에도 정치행위 따위도 하는 존재이므로 농촌생활과학은 multidisciplinary 해야 한다.

'60년대의 존 멜런 교수는 농촌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upgrading the quality of life"라 하였다. 여기서 도시에 비해 농촌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고 이 격차를 좁히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소득의 향상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67개월의 복합변수의 문제가 된다. 즉 『소득분배구조』, 『문화복지시설 여하』, 『교육의 질』의 문제인데, 여기서 농촌의 교육의 질에서는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얼마전 직할시가 생기기전만해도 도농통합의 개념으로 인근의 직할시 학교에 보내던 것이 직할시가 생기고는 못보내게 된다든지, 교육의 비용도 공식 통계상으로 도시의 두배가 더 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것들이 농촌의 질을 경정하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정치, 정책, 행정, 제도문제가 되며, 이런것도 연구분석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조건』인데, 이는 생태학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공해는 도시에만 있고 농촌에는 없는 것으로들 말하는데, 도시의 공해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촌의 공해는 생명을 앗아간다. 통계에 보면 농약에 의한 사망이 890명/년인데(이 중 1/3은 자살이긴 해도), 여기에 질병을 더하면 3,000명/년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부녀화, 노령화로 인한 기계화 추세가 가속화 되는데, 이 기계화에 따른 상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누구나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운이 없고, 재수없는 것으로 돌리지만 같은 사고가 도시의 공장에서 생기면 이는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된다. 실제로 농촌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것도

농촌생활화과학회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겨난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즉 『제도문제』, 산업차원의 제도개선, 기계화에 따른 상해문제 등도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여러문제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금지문제』, 즉 만족감을 들겠는데, 인간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느냐 하는 것이 질결정의 가장 큰 요소라고 본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정신적 금지의 붕괴일 것이다. 즉 다른환경, 정치, 제도, 다른 조건 등은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부업개량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우습다. 입식부업만 하면 농촌총각이 장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제 막 탄생한 농촌생활과학회의 과제는 이제 엄청나게 되었다. 가정학 차원의 연구에서 범위가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활개선사업의 타개방안을 살펴보면서 연구자의 접근방안을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협력을 하도록 하자.

‘우리 학문만, 우리 여성만’에서 탈피하여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생활과학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2) 학제간 접근의 중심은 학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를 실천시키는 것이 지도사업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도체제가 대폭 개선되어야겠다. 과거의 권의주의, 남성위주, 기술본위의 방식으로는 파고들 수 없다. 이는 사회학 제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유분야가 있는 듯 고집하면 안된다.